

# 미 “다소 미흡” 중·러 “환영” 일 “긍정”

## ■ ‘10·4 공동선언’ 주변국 반응 “평화체제 큰 진전” 공감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10·4 남북관계발전 평화변영선언’에 대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일 각국의 정부와 언론은 제각기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당초 기대에 못치지 못했다 평이 대체를 이룬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미국=즉각적인 논평은 자제하면서도 당초 기대엔 다소 미흡하게 아나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회담 결과는 “두 정상간 어떠한 합의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기대에는 다소 못미쳤다는게 주조를 이루는 분위기다.

과거 ‘광복정치’를 보여온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핵문제에 대한 전향적 선언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일부 있었지만 발표문이 공개되자 ‘혹시나’에서 ‘역시나’였다는 평가로 바뀌는 분위기다. 비록 100% 만족하지 못해도 북한의 핵폐기 프로세스에 대한 6자회담 합의문이 이날 공식 채택됐고, 부시 행정부도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한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향후 6자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낙관론도 만만찮다.

◇중국=관례에 따라 정부 논평이 나오지 않았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중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특히 ‘조화사회’ 구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북 3성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 열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동북아 자유경제무역지구 건설



남북 정상의 ‘건배’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 오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체제 정착으로 경제성장에 전력 투구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동북지역 경제성장에 탄력까지 받을 수 있게 되니 중국 입장에서는 금상첨화(錦上添花)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의 결과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은 모두 지지한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충족하고 있어 공동선언을 적극 환영한다는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러시아=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한 축인 러시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에도 남북한이 합의함에 따라 그 추진 과정에서 러시아에 상당한 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들은 북핵 6자회담 합의문 채택에 이은 이날 남북한 평화선언은 한반도 긴장완화는 물론 러시아가 중점을 위한 것은 모두 지지한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충족하고 있어 공동선언을 적극 환영한다는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러시아=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한 축인 러시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반도

북한과 한국 등 주변국과의 정치·경제적 외교관계를 더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아사히신문’은 인터넷판을 통해 관련소식을 접하면서 “2000년의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할 수 없었던 군사 분야에서의 합의가 처음으로 포함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교토통신’은 서명식 생중계 소식 등 공동선언 전반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이번 공동 선언이 2000년 김 전 대통령 방북 당시 이뤄진 6·15 선언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연합뉴스

## ■ ‘10·4 공동선언’ 전문가들 평가 “평화와 번영 연결시킨 합의”

“남북 윈-윈” 긍정 평가...“양보 많았다” 지적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공동서명,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당히 구체화되고 좋은 합의” “평화와 번영을 연결시킨 합의” “남북이 윈-윈하는 합의” 등 대체로 성공적인 합의로 평가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서훈 담방이나 더욱 확고한 비핵화 의지 표명이 없는 점엔 아쉬움을 표시하는 의견도 있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광장히 많은 분야에서 기대했던 수준을 넘어 높은 단계의 상제하고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된 것 같다. 참으로 잘된 합의로 생각한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있고 전향적인 합의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서훈 담방이 명시적으로 합의문에 들어갔으면 하는 게 아쉬운 점이다. 전 반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윈-윈’하는 합의문을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서 NLL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남북간 평화 및 경제협력과 묶어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협의하기로 한 부분도 김정일 위원장의 서훈 담방과 관련한 부담을 덜어준 양보다.

▲김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평화·번영을 연결시키는 목표가 그대로 실현된 것 같다. 6·15공동선언 채택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장애요소를 제거하면서 긴장 완화와 냉전 종식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3차, 4차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가능성을 열게 됐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남쪽에서 들고왔던 의제가 대부분 반영됐다.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평화번영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한 선언이다. 핵문제 언급이 예상 이하로 적다.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의 경제협력으로 경제난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에 동북아 평화구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알린다는 요구를 충족시켰다.

▲김용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서 NLL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남북간 평화 및 경제협력과 묶어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힐 “北 테러지원국 해제 의회와 협의 개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미 의회와의 협의를 4일 시작할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3일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날 전화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측과도 다음주 일련의 회담을 열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세부 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해 “아주 분명한 이해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4일 시작될 의회와의 협의에서 “테러지원국 문제가 어떻게 진척돼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설명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테러지원국 제의 문제를 포함한 중요한 양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음주에 북한측과 일련의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고 그는 덧붙였다.

북한의 우라늄 핵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의혹을 사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명을 약속했음을 지적한 뒤, 북한에 우라늄 농축 핵시설이 있다면 이 역시 불능화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만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것도 불능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 문제와 관련,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북한측과 아주 훌륭한 협의를 했다”며 “이 문제는 북한이 해결하는 척하고 미국이 믿는 척 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해결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우라늄 핵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한 건 아니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NLL 문제’ 절묘하게 비켜가

남북 모두 ‘NLL- 평화협력특별지대 분리 접근’ 해석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일 서명 발표한 ‘10·4선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눈길을 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NLL 문제가 회담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절묘하게 비켜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 관계자들은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왔다. 북측이 NLL 문제를 서해상 충돌의 ‘근원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제6차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김영철(인민군 중장) 북측단장은 “북방한계선이 지금까지 준수해온 기본 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은 담치않은 궤변”이라

며 “냉전시대에 미국놈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주장하는 것은 90년대 사고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재설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입장을 취해온 북측이 정상회담 선언문에 NLL 문제를 반영시키지 않은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언문을 뜯어보면 양측

이 NLL과 평화협력특별지대를 분리해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북측에서 NLL 문제를 제기할 것에 대비해 해주만~한강하구에 이르는 해역을 ‘평화변영벨트’로 묶자는 역제안을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군사적 신

뢰구축 방안을 담고 있는 선언문의 제3항과 특별지대를 설치해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을 추진하자는 제5항을 분리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사실상 NLL을 특별지대 설치와 분리해 접근하자는 전략으로 협상력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적으로나 두 정상간 대화에서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등 근본적인 문제가 거론됐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선언문에 명기하지 않는 것은 11월 국방장관회담으로 넘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재설정하는 문제를 의제로 올릴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총리급회담 또는 차기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내릴 것인 전망이 우세하다.

/공동취재단

**국내 판매 1위 // 소비자 만족도 1위 //**

소니가 만든 최고의 제품들 -  
전자레인지의 왕을 불러오세요!  
하이엔드와 원거리 입체 난방까지

무등산업

**총가집 설령탕**

**확장이전**

고성능 컴퓨터, 합스드라이브, 전자잉크 프린터 등  
기존보다 50%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가집  
합계 보안을 위하여 고시보유입니다.

【주요 제품】 삼성합계, 도가시합, 공기청정기, 에어컨, 도가시합, 도가시합

총가집 설령탕

예약전화 062/374-0015